

“삼성 새만금투자 관련증인 출석 촉구”

안호영 의원, “이재용 부회장·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중 한 명이 도민에게 삼성 입장 밝혀야”

“삼성의 새만금 투자 관련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2일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이행 여부와 관련해



안호영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측 증인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핵심 증인 채택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토교통위의 경우 새만금사업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인 채택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삼성그룹은 2011년 4월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업부, 지식경제부, 전라북도 등과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 시기와 투자금액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MOU의 당사자였던 전라북도와 삼성그룹은 이행 여부에 대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현재 삼성의 투자 계획이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또 “새만금 사업은 전북지역의 최대 관심사이고 삼성 입장에서도 그룹 차원의 투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룹의 최종 의사 결정 단계에 있는 사람이 전북도민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말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이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백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가운데) 의원과 민주주의회복TF 소속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법사위 위원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화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삼성이 MOU 내용을 변경한 것인지,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증인 여부가 논의 중이지만 삼성과 관련된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삼성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일부 언론이 말하는 기업인 만신주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

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최근 삼성이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불량 문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MOU를 대하는 삼성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면서 “국내 초일류기업, 글로벌기업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삼성은 불명확한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삼성을 둘러싼 새만금 의혹을 해결하는 첫 단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 삼성그룹의 입장을 책임있게 말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중 한 명이 분명한 답을 해야 하며 2011년 MOU체결 당시에 당사자가 아니어서 내용을 모른다면 정확한 보고를 받은 후 삼성의 입장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이춘석 “재판결과 불만 진정, 4년 새 3배 ↑”

최근 4년 새 재판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진정이 부쩍 급증해 국민들의 사법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진정, 청원 등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진정을 제기한 건수가 2011년에는 537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59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재판진행에 관한 진정 건수는 2011년 141건에서 2015년 51건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더라도 결과에는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감사원장, 감사위 의결 전 대통령에 수시보고

누리과정 감사 등 감사원의 표적감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가운데, 감사원장이 누리과정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대통령에 수시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에 따르면 올해 감사원장은 4월 25일 5건, 8월 12일 6건 등 11건을 대통령 수시보고 했는데 이중 9건은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가 확정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결로 확정된 감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등 2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지난 8월에 수시 보고된 5건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데다 이중 4건은 아직 내부 절차조차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누리과정 감사사가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받고도 감사내용 의결 전에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감을 통해 정말 시급성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야 했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이용호 의원, 정부통합전산센터 해킹시도 급증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해킹 시도, 공공이피인 해킹·부정 발급(2015년) 등으로 인해 사이버 안전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가 핵심정보가 통합관리되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정부통합전산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에 대한 해킹시도건수는 총 18만 7,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4,039건, 2012년 28,797건, 2013년 35,810건, 2014년 18,123건이었던 해킹 공격은 2015년 5만 2,795건으로 급증했고,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이미 3만 7,609건의 해킹이 시도되어 2016년에는 해킹 위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정부부처별 해킹시도 건수를 분석해보면, 행정자치부가 1위로 1만 8,211건, 외교통상부가 1만 7,630건이고, 산림청(6,675건), 산업통상자원부(5,974건), 국토교통부(5,902건), 경찰청(5,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들어온 해킹 IP를 추적한 결과, 2014년까지는 한국 내 해킹 공격이 많았으나 2015년부터 중국, 타이완, 미국 등 해외 IP가 급증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15년 10,642건에서 2016년 7월까지만 총 11,090건 급증해 전체 해킹공격의 1/3에 달하는 수준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대일항쟁기 여성근로정신대 생활 안정·명예 회복 지원하자

‘전북도 지원 조례’ 제정 세미나 개최... 국주영은·송지용 의원 공동발의

전라북도의회(환경복지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는 국주영은 의원과 송지용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제안이유에 대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주영은 의원



송지용 의원

주제발제에 나선 송지용 의원은 “사실 근로정신대라고 모집해 놓고 위안부로 팔려가거나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잦았다. 때문에 성 착취를 당하지 않은 여성근로

자도 종전 후 고국에 돌아와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받아 결혼과 사회생활에 많은 차별과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후지코시 강제연행과 명예회복 활동을 하고 있는 나가가와 미유기 사무국장(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은 “피해자 중에는 손가락이나 손이 절단된 사람, 후지코시 시절의 악몽으로 불면증이나 정신 장애로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까지도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나 병상에 있는 사람 등 강제연행은 어린 소녀들의 인생을 크게 바꾸고,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인 상임대표는 “전시 여성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여자근로정신대’ 문제가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성적 착취가 없었다고 해서 인권유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상처 또한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자라는 사실마저 감추는 이 비극적 현실은 전적으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시, 전라남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월 30만원씩의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신광영 기자

즐겁고 행복한 날~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제58차 지구대회 ·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와이즈멘의 대중화” 라는 주제로 한국와이즈멘 발전을 위한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제58차 지구대회 및 가족한마음 체육대회에 귀중한 분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격려 바랍니다.

- 대회장 김 정 호 -

제58차 지구대회를 축하드립니다.
- 전주모아클럽 회장 서 정 훈 -

행사 안내

일시
9월 24일(토) 오전 10시

장소
전주 종합경기장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Tel. 063-239-2553

접수 및 등록
10:00~10:30

입장식 및 개회식
10:30~11:00

15-16 시상식
11:00~11:30

체조 몸풀기
11:30~12:00

중식
12:00~13:00

한마음 체육대회
13:00~16:00

장기자랑 및 경품 추첨
16:00~17:00

초대가수
오윤라